



필리핀

정정불안의 경제적 파급효과

지난 2월 24일 국가비상사태 선포로 촉발된 필리핀의 정치적 불안이 점차 안정을 찾으면서 이제는 이번 사태가 필리핀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40년간 필리핀은 1인당 GDP가 1천 달러를 벗어나지 못하고 전 인구의 약 40%가 하루 1달러로 생활하는 빈곤 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는 독재와 무능력이 번갈아 나타났던 정치적 요인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독재 정권과 무능한 정권 번갈아 나타나

1986년 이른바 '피플파워'(people power)로 불리는 시민혁명에 의해 장기집권과 부패로 얼룩졌던 마르코스 정권이 무너졌으며, 빈민층의 지지를 업고 등장했던 에스트라다 대통령은 리더십 부재와 무능력한 국정운영으로 필리핀 경제를 희생시키는데 실패하면서, 필리핀 국민들은 2001년 2차 피플파워를 통해 에스트라다 정권을 붕괴시켰다. 당

시 부통령이던 아로요가 에스트라다에 이어 집권하였으나, 아로요 정권 또한 별반 다르지 않은 모습을 보였다. 새로운 일자리 800만개 창출, 획기적인 외자 유치, 공기업 민영화를 통한 재정개혁 등의 정권 출범 당시 내걸었던 공약들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였다.

게다가 아로요 남편의 비리의혹과 2004년 5월에 치러진 대통령 선거에서의 개표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부정선거를 지시하는 아로요 대통령의 통화내용이 방송에 공개되고 이에 대해 아로요 대통령이 공개 사과하는 등 정권의 무능력과 부정부패, 정국불안이 총체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아로요 대통령은 두 번의 쿠데타 시도와 의회의 탄핵 시도를 힘겹게 막아내면서 정권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유력 가문간 권력투쟁에서 벌어진 일종의 친위 쿠데타

지난 2월 26일은 1986년 마르코스 대통

령을 퇴진시킨 1차 피플파워 발발 20주년 기념일로서, 이날을 전후하여 부정부패와 무능력에 지친 필리핀 국민들의 반 아로요 시위가 계획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아로요 대통령은 기념일 이틀 전인 지난 2월 24일 군부 쿠데타 위협 등을 이유로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였다. 뚜렷한 쿠데타 움직임이 나타나지도 않은 상황에서 선포된 국가비상사태의 정당성에 대해 여당 내에서도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아로요 정권은 비상사태 선포 후 주말을 포함한 3일 동안 약 100여명의 야당 지도자와 주요 군 지휘관들을 체포하는 등 선제적이고 강경한 대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강수가 일단은 효과를 거둔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치권과 군부의 분주한 움직임과는 대조적으로 필리핀 국민 사이에서 시위 등의 정치적 동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1986년의 1차 피플파워에 수십만 명의 군중이 참여했던 것과는 큰 대조를 이룬다. 카톨릭 지도자들의 사회안정 호소도 큰 역할을 하였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필리핀의 정치현실에서 찾을 수 있다. ‘마르코스가

문’, ‘아키노가문’ 등 중앙의 권문세가와 이들을 추종하는 지방의 중소 권문세가 등 약 150여개의 권문세가가 얽혀 필리핀 정치를 좌우하고 있다. 더구나 중앙정치의 세력판도 변화에 따라 권문세가들간의 합종연횡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어, 필리핀의 정치체제는 엄밀하게 민주주의라기보다는 유력가문 연합체간 이합집산과 경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와중에 1차 피플파워 20주년을 맞아 반 아로요 투쟁이 격화될 것을 우려한 아로요 정권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를 두고 일부 언론은 의도적으로 몇몇 하급장교들의 동요 움직임을 쿠데타로 확대 해석하여 이를 정권강화에 역이용한 것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대다수 국민들이 이미 정치에 관심을 잃어버린 상황에서 선포된 이번 국가비상사태는 유력가문간 권력투쟁의 와중에서 발생한 일종의 친위 쿠데타에 불과하다는 해석이 설득력있어 보인다.¹⁾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전망

정치적 불안이 필리핀 경제에는 어떠한

〈표〉

필리핀의 주요 경제지표

단위: %, 억 달러

구분	2004	2005(e)	2006(f)	2007(f)
경제성장률	6.0	4.7	4.5	4.8
재정수지 / GDP	-3.9	-2.8	-1.8	-1.2
수출	387	405	426	449
수입	451	467	488	514
경상수지	21	39	44	43
경상수지 / GDP	2.4	4.0	4.1	3.5

자료: EIU.

1) Asian Wall Street Journal, 2006. 2. 2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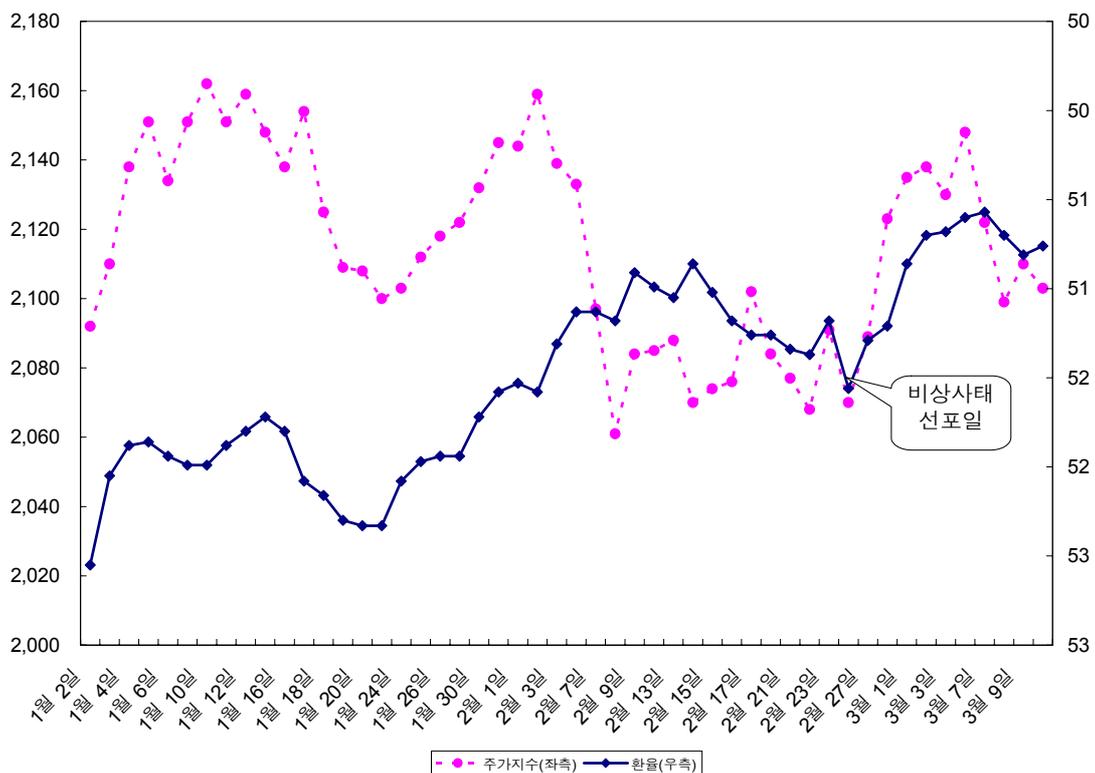
양상을 보여 왔는지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우선 고유가 등 외부요인 악화로 필리핀은 2004년 이후 경제성장세가 계속 둔화되고 있다. 실제로 2004년 6.0%를 기록했던 실질경제성장률이 2005년에는 4.7%까지 떨어진 것으로 추정되며, 2006년에도 4.5% 내외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유가와 함께 필리핀 경제를 괴롭히고 있는 두 번째 문제는 만성적인 재정적자이다. 필리핀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꾸준히 세계개혁과

국제수지 건전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최근에는 우여곡절 끝에 부가가치세율을 10%에서 12%로 인상하여 세수확충에 있어서 의미있는 진전을 이루었다.²⁾

한편, 국가비상사태가 선포된 당일인 24일, 주가는 약 1% 가량 하락하였고 폐소화 환율 역시 전날 증가인 1달러당 51.66페소에서 52.20 페소까지 떨어졌다. 그러나 이후 정치상황이 빠르게 안정되면서 주식시장도 강세로 돌아섰고, 폐소화 환율도 비상사태 선포 1주일만인 3월 2일에는 1달러 당

〈그림〉 국가비상사태를 전후한 주가 및 환율 추이



자료: Asian Wall Street 및 www.viewswire.com

2) 2006년 2월 9일, S&P는 부가가치세를 도입하는 등 재정수지 적자를 축소하기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이 가시화된 점을 높이 평가하면서 필리핀의 신용등급 전망을 부정적(Negative)에서 안정적(Stable)으로 상향 조정한 바 있음(등급은 변동 없이 BB-로 유지함).

51페소대에 다시 진입하였다. 이미 만성적인 정치불안에 적응된 필리핀 국내외 투자자들은 정정 불안이 안정화되어가는 속도 등을 근거로 현재의 사태가 더 이상 확대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주식투매나 페소화 투매에 나서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세수 확충 등을 통한 재정건전화에 힘써야

단기적인 충격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필리핀 경제가 곧바로 성장세로 진입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고유가 현상이 일시에 해소될 가능성이 낮고, 만성적인 재정수지 적자문제도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IMF도 3월초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세수확충 등을 통한 재정수지 개선을 위한 필리핀 정부의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할 경우 2004년에 6%를 기록했던 경제성장률이 2006년에는 5%에도 미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³⁾ 또, IMF는 필리핀의 정부채무가 GDP의 80%

에 달하여 아시아 국가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현재 아시아를 포함한 신흥개도국에게 다소 우호적인 최근의 국제금융시장 여건이 다시 악화될 경우 필리핀은 언제든지 어려움에 봉착할 수도 있다고 지적하였다.

그런데 IMF 보고서가 발표된 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아로요 대통령은 정정불안으로 흥흥해진 민심을 달래기 위해 금년 1월 1일부터 소급하여 120만 명에 달하는 공무원의 기본급을 1,000페소씩 인상하는 대통령령을 발표하였고, 연방상원 역시 경쟁적으로 금년 7월 1일부터 1,000페소를 추가로 인상한다고 발표하는 등 재정악화를 초래할 만한 선심성 조치들이 연이어 발표되고 있는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이라 판단된다.⁴⁾ 결론적으로 세수확장과 세제개혁 등을 통해 재정상황을 호전시키려는 필리핀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결실을 맺을지에 따라 필리핀의 경제성장 속도가 결정될 전망이다.

【김기상】

3) IMF, Staff Report for the 2005 Article IV Consultation and Post-Program Monitoring discussions, 2006. 3.

4) 일련의 공무원 최소임금 인상 조치로 금년 중 195억 페소, 내년에는 260억 페소의 추가적인 재원이 필요함.